



이종국 교수

일진사/A5신/546면/18,000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중학교 국사책이 최근 단행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역사 왜곡의 귀추를 주목하던 사람들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남들은 세계화를 외치는 마당에, 종교도 아닌 '국가'라는 낯은 이념으로, 다수의 교육받은 대중을 보수 래디컬리즘에 몰아넣는 집단주술의 힘에 놀라사다.

최근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일진사)를 펴낸 이종국 교수(56, 해천대 전자출판과)도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국제적 분쟁까지 불러일으키는 교과서의 과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 자국의 미래를 설계한 일본의 야심”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근대 교과서사 1백년 실증적으로 정리해

이교수는 국내 교과서 연구에서 선편을 잡고 있다. 1991년 《한국의 교과서》(대한교과서)로 변변한 논문 한편 없던 출판학계에 깃발을 꽂았다. 그 후 10년이 지나 펴낸 이번 책은 당시의 문제 의식을 다듬고 시각을 넓혀 근대 교과서 출판 변천을 포괄해 서술한 ‘한국 교과서사’다.

그는 “사(史)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 없”다며 겸손해한다. 하지만, 최초의 국정 교과서 《국민소학독본》(1896)부터 개화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미 군정기를 거쳐 최근까지 1백년 교과서 출판을 실증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통사’는 못해도 그 초석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애증으로 점철된 한국 근대 교과서사 백년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펴낸 이종국 교수

교과서는 가장 보편적인 지식전달 매체다. 국내의 교과서 연구는 걸음마 단계다. 이 책은 한국 교과서사 백년을 통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동안 교과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공학적인 논의에서 탈피해 출판 매체로서 교과서의 위상을 다룸으로써, 그 동안 ‘제도논쟁’에 파묻힌 교과서의 실체에 한발 다가섰다.



한국의 교과서는 민족 개명 수단으로 출발했다. 신학문의 흡수와 국민정신의 일대 각성을 촉구

한 것이다. 아동용 교과서 《유년필독》(1907)은 민족 영웅과 명신, 학자들의 삶을 장엄하고 숭고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1909년 일제에 의해 ‘치안 유지법’ 및 ‘출판법’에 위배된다며 금지 조치당한다. 그 후 해방 전까지 교과서는 식민 매체의 길을 걸었다. 1934년 신학기용으로 보급된 《조선어독본》은 ‘우민화’의 대표적 사례다. 이교수는 이 책이 ‘조선의 행정 관청’ ‘납세’ ‘조선 지방명’ 등 당시의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분량으로 편제돼 있음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고급화되는 추세도 있었어요. 국판으로 통일되고, 사진 제판과 오프셋 인쇄 기술을 적용한 것이 그 예죠. 하지만 이것은 분량을 200면 이내로 통제하고, 서두 형식을 동일한 체제로 요식화하는 것과 함께 교과서를 제국주의적 패권 확립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였죠.”

기존의 교과서 연구 비판해

미 군정기 교과서 출판에 대해서는 따로 한 장을 할애했다. 민족주의적 지식인들로 구성된 편수 책임자들이 교과서의 전체 틀거리인 ‘교과요목’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과 모색을 거듭했던 시기기 때문이다. 당시 편수자들은 단순한 ‘행정적 직능자’를 넘어선 진정한 ‘교과서 연구자’들이었다고 이교수는 강조한다. ‘우리말 어휘 사용 빈도 조사’와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렇다.

앞으로 미 군정기에 작성·발간된 교육관련 자료를 발굴해 이를 집중 해독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우리의 경우 이른바 국책 이데올로기 및 교과서 발행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한 제도 논쟁에 휘말려, 교과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 말에는 두가지 뜻이 담겨 있다. 교과서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내용과 형식 양측면에서 획일화되는 경향을 낳았다는 것이 그 하나다. 이권 안배와 이해관계로 인해 요식적인 연구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 두번째다. 그동안 교과서를 주제로 허다한 세미나들이 열렸지만 “교과서 편집에서 복디자인 개념 도입” 같은 출판미학적 설계나, 혹은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편집 체계 개선”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는 “교과서에 실린 위인과 보통사람의 기준, 교과서 활자의 전형성 문제, 교과서와 전자매체와의 결합”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다고 지적한다.

“교과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무겁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국민 모두가 한번은 거쳐야 할 지식매체니까요. 좀더 전문적인 집필자, 편집 프로그래머들을 육성하고, 이를 제대로 비판하고 평가해줄 학계의 연구공토가 정착돼야 합니다.” - 대전·강성민 기자